

● 과학기술 인력양성 정책토론회

이른바 '이공계 위기' 현상을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2월 25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렸다.

국회 과기정위 소속 진영 의원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조현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종득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이병욱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조사실장 등이 발표자로 참석해 열띤 공방을 벌였다.

최석식 과학기술부 차관은 축사에서 "국내 대학에서 이공계를 전공한 사람의 규모는 선진국에 비해 뒤지지 않으나 기업, 연구소, 대학에서는 인재를 찾아 해외로 발길을 돌리는 '풍요속의 빈곤'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과학기술부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기업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인 KAIST 테크노 경영대학원에서 금년 9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차관은 "이는 기업의 수요에 바탕을 두어 교육과정을 새로 짜고, 대학교수와 기업현장 전문가가 공동으로 교육하는 특수과정으로서 단기과정과 학위과정을 구분해 운영된다"며 "성공할 경우에는 다른 대학에 보급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현대 연구위원은 주제 발표

에서 "2001~2010년 이공계 졸업생의 전체적인 초과공급이 예상된다"며 "연평균 1만3천600명의 이공계 학·석·박사 인력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조 연구위원은 "특히 인력의 양적 부족보다는 세부 기술분야별로 숙련 불일치에 따른 질적인 불균형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며 "핵심연구인력에 대한 충수요의 경우 박사는 2004년 5천220명에서 2012년 1만5천990명으로 20.5% 증가할 것이며, 범산업적 수요로 인해 IT(정보기술)와 CT(문화기술) 분야에서 양적 인력부족이 클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종득 교수는 "우리나라는 독일이나 영국에 비해 전문직 규모가 전체 산업의 19.2%로 선진국에 비해 낮고, 고급인력의 국제경쟁력도 취약하다"며 "따라서 전체 인력 시장의 재구성은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2010년까지 연구개발 인력은 공학, 의약학, 농림·수산학의 순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석사 이상의 연구개발 인력의 수요는 늘어나겠지만, 국내 이공학 교육에 대한 기업들의 불신이 극대화됨에 따라 양자간 불일치가 증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병욱 실장은 이러한 이공계 위기의 극복방안으로 ▲초·중·고 교육의 하향평준화 탈피 ▲산업현장 밀착형 대학교육 강화 ▲기업내 이공계 인력 재교육 강화 ▲범 사회적 이공계 우대 분위기 조성 등을 제시했다.

● 연구중심대학 전국 15곳 육성

교육인적자원부는 현재 1~3개에 불과한 연구중심대학을 전국적으로 15개로 늘리기로 했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3월 8일 정부중앙청사 제1브리핑실에서 취임 이후 첫 브리핑을 갖고 "학부모가 보내고 싶어하는 대학이 현재 1~3개, 최대 5~6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적어도 전국에 15개는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세계 수준의 대학이 미국에 130개 있고, 중국도 '211공정'을 통해 100곳을 확보하려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인구나 경제규모로 볼 때 연구중심대학이 15개는 돼야 하고, 따라서 대학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5~6개와 함께 이미 상당부분 경쟁력을 갖춘 수도권 대학과 지방 국립대 등이 조금만 노력하고 투자하면 학부모가 자녀를 입학시킨 뒤 '성공했다'고 평가하는 수준에 들 것으로 김 부총리는

전망했다.

김 부총리는 “대학 구조조정이 일정대로 추진돼 통·폐합이 이뤄지면 2~3년 이내에 대체적으로 윤곽이 나타날 것이다. 나머지 대학은 100% 취업을 위한 특성화된 교육중심대학으로 육성할 방침이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립대 구조조정을 위한 권역별 구조조정위원회에는 도지사, 시장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신입생 충원율, 교수 1명당 학생 수, 취업률 등을 보여주는 대학정보공시제 도입과 외국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신력 있는 대학평가원 설립 등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0.4%에 불과한 대학재정을 경제협력개발(OECD) 수준인 1%로 끌어올리기 위해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지자체 교육투자를 촉진하며 기숙사 등에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사립대의 기부금을 100% 손비처리하거나 국채를 발행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상반기 교육인적자원부 산하에 인적자원혁신본부를 설치하고 대학업무나 초·중등교육의 집행 기능은 자율화하거나 분권화하는 등 기능을 재정비하겠다고 소개했다.

김 부총리는 “교육정책은 효과

가 3~5년 후에 나타나는 반면 갈등과 부작용은 곧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고사를 금지하는 ‘불(不) 정책’ 등은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 농·어촌학생 대입 특별전형 4%로 확대

농·어촌학생의 대입 특별전형 비율이 입학정원의 3%에서 4%로 늘어나고 산업대에도 수시모집 제도가 도입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1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7월부터 시작되는 2006학년도 수시1학기 모집부터 적용한다고 3월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어촌지역 고교 졸업자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에 따른 이농현상을 막기 위해 농·어촌 학생의 정원외 대입 특별전형 비율을 각 대학 입학정원의 3%에서 4%로 늘렸다. 아울러 전문직업인이 되려는 학생이 자신의 소질 및 적성에 따라 원하는 학교에 소신 지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산업대에도 수시모집 제도를 도입했다.

따라서 산업대 수시모집에 일단 합격하면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다른 산업대나 일반 4년제 대학, 교육대, 전문대의 정시모집,

추가모집 등 다른 모집시기에 지원할 수 없게 된다.

또 입학 학기가 같은 2곳 이상의 대학, 산업대, 교육대, 전문대에 합격한 경우에는 1곳에만 등록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입학이 무효 처리된다.

● 학교에 민간투자 허용된다

초·중·고교 및 대학에 민간투자가 허용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대학 설립·운영 규정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이 3월 1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3월부터 시행한다고 3월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문화·집회시설, 운동시설, 주차장 등 교육 및 공공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로 설립주체에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국가·지자체·연구기관과 산업체 등이 설립주체의 동의를 받아 건축하는 시설물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교지(校地)에 설립주체가 아니면 건축물을 설치하거나 소유할 수 없도록 해 민간기관은 건물을 지어서 기증하지 않는 한 여유자금을 투자, 수익을 내고 싶어도 할 수 없도록 돼 있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초·중·고교의 경우 당초 시·도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라는 전제를 달았으나 투자 촉진을 위해 국무회의에서 삭제됐다고 설명했다.

대학 및 초·중·고교 시설에 대한 민자 유치는 민간이 시설을 지어 일정 기간 임대료 등 사용·수익권을 얻어 시설투자비를 회수한 뒤 소유권을 넘기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추진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최근 저금리 추세를 반영해 학교법인이 확보해야 할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을 '100분의 5 이상'에서 '100분의 3.5 이상'으로 낮추고 교육과정의 심화·보충학습에 필요한 시설의 기준면적을 시·도 교육감이 지역 및 학교특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학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기숙사 등 편의시설을 확충할 수 있게 되고 여유자금이 있는 정부투자기관과 보험회사 등은 적절한 투자처를 찾게돼 건설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사립대 해산·합병시 재산감독, 학사관리관 도입**

2006년부터 대학 구조조정에

따른 사립대 해산·합병 때 잔여 재산이나 학생, 직원 등의 문제를 처리할 재산감독관 및 학사관리관이 도입된다.

또 국립대는 기성회계와 일반회계를 대학회계로 통합, 운용하되 외부 인사가 반드시 참여하는 재정위원회가 설치돼 주요 재정사항을 심의하게 되며 대학·전문대의 평가를 전담할 고등교육평가원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직접 운영한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해 말 대학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한 뒤 그 후속 조치로 제정하거나 개정하기로 약속한 각종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이 최근 부처협의 등의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내용은 관련 부처나 단체 간 이해관계가 달라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대학 구조개혁 특별법 제정 = 3월 13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한계 학교법인의 해산·합병, 퇴출이 법제화된다.

또 이에 따른 해산법인의 잔여 재산 귀속특례 인정 방안이 마련되고 학생, 교직원 등의 신분상 불이익 최소화를 위한 대책도 담긴다.

학교법인의 해산 또는 합병인 가지 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감독할 재산감독관과 폐지되는

학교의 학생 처리 및 학적부 관리 등의 관리 담당할 학사관리관을 두겠다는 것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4월 법안을 입법예고한 뒤 7월 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1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학교법인 해산시 재산 출연자에게 잔여재산 일부를 되돌려주는 것에 대해 국회 일부와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예상된다.

◆국립대학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 국립대 회계제도 개선 차원에서 국고 일반회계와 대학 기성회계를 통합한 대학 회계제도가 도입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따라서 회계연도와 학년도(3월초~다음해 2월말)가 일치하게 되고 입학금·수업료 등 각종 수입을 대학이 직접 사용할 수 있게 되며 교육·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 운영 등을 통한 대학재정 확충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학재정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의결하는 기구로 교직원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등의 추천인사, 학부모 대표 등 9~15명으로 구성된 재정위원회를 두도록 할 방침이다.

또 6급 이하 정원은 총정원 범위에서 총·학장이 정하고 과장급(4급) 20% 이내는 직위공모를

하며 자체 재원으로 공무원 이외의 교원, 강사, 직원 등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예·결산 확정 뒤 1개월 이내에 대학신문 등에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그러나 기획예산처는 대학회계 제도는 독립법인 상태에서나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교수협의회 등은 대학재정위원회 구성에 교직원과 동창회, 학부모, 사회인사가 참여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데다 학생측도 회계가 통합되면 등록금이 대폭 인상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6월께 입법 예고하고 9월 국회에 제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고등교육법 개정 = 고등교육 재정투자의 비효율성을 없애고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신입생 충원율과 졸업생 취업률, 부채비율 등을 보여주는 '대학정보공시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허위 공개시 제재 수단도 규정된다.

지금까지는 대학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각종 지표가 공개되지 않아 학생·학부모·정부·산업체 등이 학교 선택이나 직원 채용 때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아울러 고등교육 시장의 점진적 개방을 앞두고 우리 대학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공신력 있는 정보 제공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대학운영과 관련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대학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대학교육의 내실화를 꾀하고 대학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학교 선택권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4월께 입법예고한 뒤 7월 국회에 제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서는 교육여건이 어려운 대학이 유예기간 등을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등교육평가원 설치 법안 제정 = 일반 4년제 대학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또 전문대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실시하던 고등교육기관 평가를 재정지원 사업의 경우 교육인적자원부가 직접 하겠다는 게 교육인적자원부 복안이다.

즉, 고등교육평가원을 세워 평가의 객관성·전문성을 높임으로써 대학에 교육여건과 교육과정, 학생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고 학생·학부모에게 대학·학과 선택시 도움을 주며 정부·기업 등에도 양성된 인력의 질을 기증할 기

준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평가 결과에 따라 한정된 고등교육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으며 학위 및 자격의 국제적 호환성 확보, 대학의 해외 진출 지원 등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교육인적자원부는 기대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5월 입법예고를 거쳐 6월 국회에 제출한 뒤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회나 한국공학교육인 증원 등 분야별 평가기관은 고등교육 평가체제 개편과 총괄·조정기구 설립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은 '육상육'이라며 반대하고 있고 국가기관의 대학·전문대 평가가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논란도 나오고 있다.

평가기구 설립에 따른 140억 원 규모의 예산 확보 문제도 남아 있다.

● 국립대 50개 → 35개로 줄인다

국립대가 2007년까지 50개에서 35개로 통·폐합되고 입학정원도 10% 의무적으로 감축되며 기업의 사립대 기부금 손금(損金) 인정비율은 현행 50%에서 100% 전액으로 확대된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은 2학기부터 정부가 보증하는 방식으로 개

편대 4년간 2천만 원에서 생활비까지 포함해 4천만 원으로 규모가 확대되고 기간은 '10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1학기 13만 명인 수혜자는 2학기 20만 명, 내년 50만 명으로 늘어난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3월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업무보고에서 국립대를 2007년까지 35개로 줄이기로 하고, 이를 위해 권역별 구조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 5월 말까지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도록 하는 한편 올해 800억 원, 내년부터 매년 3천억 원의 예산을 통·폐합을 선도하는 대학에 맞게는 연간 200억 원을 2~5년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와 관련 브리핑에서 "이미 통·폐합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대학이 8곳, 체결하려는 곳이 8곳이고 성공적인 통합모델이 1~2곳 나와 분위기가 확산되면 그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는 뜻"이라며 "재정 지원시에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도록 협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다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 "현

단계에서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지역균형 발전도 큰 목표인 만큼 국립대가 통·폐합으로 권역별로 핵심 역할을 할 경우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사립대도 구조조정에 앞장서는 10~15개대에 20~80억 원을 지원하는 등 행·재정 및 세제상 혜택을 주는 대신 교원확보를 등을 채우지 못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또 고등교육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별도의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기업의 사립대에 대한 기부금 손금 인정 비율을 50%에서 100%로 확대하기로 했다.

따라서 기업의 세금 부담이 줄어 기부문화가 확산되는 동시에 대학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까지 허용돼 사립대 재정 상황이 크게 나아질 것으로 교육인적자원부는 기대했다.

이와 함께 2단계 '두뇌한국 21(BK21)' 사업을 내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하고 연간 예산도 2천억 원에서 4천억 원으로 늘리는 한편 노벨상 수상자 배출을 위한 '스타교수' 50명 정도를 뽑아 매년 2억 원씩 10년간 장기 지원하기로 했다.

초·중등교육 내실화 차원에서 저소득층과 맞벌이 부부의 자녀를 위한 '방과후 학교' 제도를 도입해 올해 48개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교강·교강 및 동료교사,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원평가제를 역시 48개교에서 시범 시행할 계획이다.

또 교육인적자원부총리가 위원장인 인적자원개발회의를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인적자원위원회로 개편하고 인적자원 정책의 체계적,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교육부에 차관급을 본부장으로 하는 인적자원혁신본부를 두기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밖에 ▲ EBS 강의를 고3 수능 위주에서 고1, 2 내신·인성·비교과 프로그램으로 확대하고 ▲2010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5만 명을 유치하며 ▲ '정책입찰공모제'를 통해 사무관까지도 팀장으로 발탁하겠다고 보고했다.

● '지방대학 활용 지역문화컨설팅' 사업 선정

문화관광부는 3월 21일 지역의 대학과 문화예술전문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지방대 활용 지역문화컨설팅' 사업을 선정했다.

이 사업은 지방대학 활성화와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올해는 '전통재래시장 5일장을 활용한 문화관광 상품 개발 컨설팅' (제주대) 등 14개, 내년에는 '영천 소재 문학·역사자원 활용 문화상품 개발 및 문화축제 기획 컨설팅' (위덕대) 등 8개를 공모를 통해 선정했다. 이들 사업에는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건당 5천만~1억 원 등 모두 10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문화관광부는 내년도 사업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4월 중 추가 사업을 공모할 예정이다.

● 이공계 대학생 1만7천명 장학금 지급

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 이공계열 대학생 및 대학원생 1만7천 172명에게 국가장학금 795억 원을 지급하기로 확정했다고 3월 20일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우선 관련 과목 내신 및 수능성적이 우수한 이공계열 학과(학부) 신입생 3천 500명에게 19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교 3년간 수학·과학과목 평균석차가 상위 20% 이내이고 수능시험 수리 '가' 와 과학탐구영역 성적이 수도권 대학 진학자의 경우 1등급, 비수도권은 2등급 이내이면 신청 자격이 있다.

선발된 장학생은 재학중 각 대학이 정한 학업성적을 유지하면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비수도권 대학 신입생 중 수능시험 수리 '가' 와 과학탐구 성적이 모두 1등급일 경우 교재구입비 등으로 연 200만 원, 2등급 이내이면 연 100만 원을 각각 주고 수도권 소재 대학에 입학한 수리 '가' 및 과학탐구 1등급 학생에게도 연 100만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2003~2004학년도에 선발돼 현재 2, 3학년에 재학중인 이공계 장학생 1만72명 가운데 성적미달, 휴학 등으로 장학금 지급이 중지된 재학생을 빼고 458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업성적, 연구실적 등을 기준으로 총장 추천을 받아 이공계 대학원 석·박사과정생 1천800명에게 1명당 연간 400만 원씩 총 72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특히 고교 때 학비를 지원받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 학생 가운데 이공계로 진학한 1천500명을 뽑아 75억 원을 나눠주기로 했다.

이 사업 장학생으로 선발될 경우 학비 부담으로 중도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4년간 계속 지급하고 대학 자체 재원에서 기숙사비, 생활비 등으로 1명당 연간 300만 원

정도를 연계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특히 성적우수자 위주 장학금 지원 체제를 기존관료 위주로 개편하고 장학금 액수도 학비 조달에 충분한 정도로 지급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 '수도권대학 특성화 사업' 4년간 지원

올해부터 4년간 진행되는 '수도권대학 특성화 사업'이 5백40억 원 규모로 25개교를 선정하는 '자유과제'와 6~9개교에 60억 원을 지원하는 '지정과제'로 나뉘어 실시된다.

총 6백억 원이 지원되는 올해 사업은 대학구조개혁과 연계, 신청기준이 강화돼 전임교원 확보율이 50% 이상 돼야 하며, 입학정원 감축 등을 평가하는 '구조개혁' 실적이 평가지표에 20% 반영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월 29일, 수도권 소재 73개 국·공·사립 대학을 대상으로 한 '2005 대학 특성화 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하고 5월 중에 사업신청서를 제출받아 6월 지원대학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각 대학이 특성화 분야를 신청하는 '자유과제'는 대규모 대학 10곳과 중·소규모 대학 15곳 등

25개교 내외를 선정해 이중 17개교는 4년간, 8개교는 1년간 각각 지원한다.

'지정과제'는 ▲인문학 분야 인력양성 및 교양교육 강화(학부) ▲국가인적자원개발 및 지역인적자원개발 전문가 양성(대학원과정) ▲대학행정·경영 전문가 양성 및 재교육(대학원과정) 등 3개 분야에서 6~9개교를 선정, 4년간 지원한다.

사업 참여 요건은 ▲산학협력단 설치 ▲전임교원 확보율 50% 이상(산업대 40% 이상) ▲신입생 등록률 90% 이상이어야 한다.

전임교원 확보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학은 사업신청서 마감일까지 교원을 추가로 확보하거나 2006년도 입학정원을 감축해 이 기준을 맞추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단에 선정된 대학은 오는 2008년까지 전임교원 확보율을 59% 이상(산업대 48% 이상) 달성해야 하며,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시한 연도별 전임교원 확보율을 준수해야 한다.

평가는 '특성화 추진 영역'(65%)과 올해 신설된 구조개혁 영역과 교육복지, 국제화 등 '정책유도 영역'(35%)를 합산해 지원대학을 선정한다.

입학정원 감축 실적 및 계획 등

을 평가하는 구조개혁 영역은 다음주에 대학구조개혁 재정지원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추후 공고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서는 구조개혁 관련 지표를 제외한 정책유도 영역 자료는 4월 25일까지, 특성화 추진 영역은 5월 12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였다.

대학들은 자유과제와 지정과제별로 1개 사업단씩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자유과제의 경우 최대 40억 원까지, 지정과제는 10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특성화 신청 사업이 대학별로 비슷해 올해부터 인문학과 기초학문 등 국가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분야를 '지정과제'로 공모하게 됐다"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또 수도권 특성화 사업이 다년도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매년 연차평가를 실시하고, 2007년 하반기에 중간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수도권 대학 특성화 사업에 2006년 8백억 원, 2007년 1천억 원, 2008년 2천억 원을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

● 54개 대학, 국가지정연구실사업 최종 선정

강영중 고려대 교수, 김은규 한

양대 교수, 나재운 순천대 교수의 연구실 등 전국 54개 대학 연구실이 과학기술부가 실시하는 2005년도 국가지정연구실(NRL)에 최종 선정됐다.

과학기술부는 올해 전국 75개 대학에서 7백15개 과제를 신청받아 총 3차례 단계별 평가를 거친 끝에 기초·원천기반 연구과제를 수행할 54개의 연구실을 최종 선정했다고 3월 30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국가지정연구실에는 금년 4월부터 매년 2~3억원의 연구비가 최장 5년까지 지원된다.

선정된 연구실을 대학별로 살펴보면, 서울대가 9개로 가장 많이 선정됐고, 연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가 다음으로 각각 7개 연구실이 선정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소재 대학 26개, 충청 9개, 호남 8개, 영남 11개 선정됐으나, 강원지역에서 선정된 대학은 한 곳도 없었다. 특히 서울을 제외한 지역 대학 중 포항공대를 제외하고 동아대가 유일하게 이번 사업에 선정됐다. 기초연구국 원천기술개발과 강용호 과장은 "선정된 뒤 2년 후 단계 평가가 실시되며, 연구실적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하위 20% 과제는 지원이 중단을 통해 연구자들 간 경쟁을 촉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 '박사학위장사' 대학입중 조치

교육인적자원부는 일부 대학이 의대, 치의대, 한의대 박사학위 과정을 부정하게 운영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데 대해 해당 대학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4월 4일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우선 전국 63개 의대, 치의대, 한의대의 대학원 교육과정 운영과 학위수여 실태를 자체적으로 조사해 보고하도록 한 뒤 문제점이 드러나면 즉각 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리 혐의가 포착되거나 각 대학이 보고한 학위수여 및 학점 운영 현황, 전문학회지 논문 게재 및 표절 여부 등을 분석해 비리 의혹이 있다고 여겨지는 대학에 대해서는 감사팀을 파견해 강도높은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재정적인 지원을 제한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특히 금품을 수수하는 등 부정 학위 취득 관련 교수는 징계 등 조치를 취하고 의사에 대해서도 학칙과 관련 규정에 따라 학위수여를 취소하도록 해당 대학에 요구할 계획이다.

이 밖에 전국 의학, 치의학, 한의대 협의회장과 대한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협회장 등에게도 자정 노력을 촉구하고 '대학원 학위

제도 운영 개선 추진팀'을 구성, 부정학위 수여나 취득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는 동시에 예방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한편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박사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번 사건에 연루된 대학들도 학칙과 규정 등을 통해 대학원위원회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 등의 찬성으로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비리 교원 등에 대해서도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라 직위해제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위 남발 및 학사행정 문란을 막기 위해 1964년부터 학위등록제를 시행했으나 규제 철폐 차원에서 고등교육법 등을 개정해 2001년부터 교육인적자원부에 별도 등록을 하지 않고 대학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 대학평가 엄격하게 해야

4월 1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교육분야에 대한 관심이 달아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국가경쟁력을 높이려면 교육부터 손을 대야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면서 대학교

육 개혁, 대안학교 활성화, 고교평준화 재검토, 로스쿨 도입, 교육행정 개편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다양한 소신과 해법을 제시했다.

열린우리당 최재성 의원은 대 학교육 개혁과 관련, "무조건 학생 수를 줄이고, 학교 수를 줄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며 "국립대학은 순수학문, 기초학문, 연구 중심 대학으로, 사립대학은 산업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응용, 실용학문 중심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또 대안학교 활성화를 거론하며 "기존 입시위주 교육에서 벗어나려면 제도권 밖의 대안학교를 공교육 체계 내로 편입시키는게 바람직하다"며 "성적평가가 없는 가칭 '열린학교'를 전국에 100개 이상 설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어 "사학분규의 원인은 사학설립자와 이사장에 모든 권한이 집중된 폐쇄적 구조 탓"이라며 개방형 이사제 도입과 학교운영위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나라당 허천 의원은 로스쿨 도입과 관련,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로스쿨을 도별로 배치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질병으로 학교를 가지 못하는 학생들을 돕

기 위해 전국 종합병원 내에 '호스피탈 스쿨(Hospital School)'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이해찬 총리는 교육개혁과 관련, "우리의 교육을 너무 자학하고 조금만 못하면 세계 최하위인 것처럼 생각하는건 문제"라며 "현 7차 교육과정을 잘 진행하면 선진국 수준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다만 대학교육의 수준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대학교육 평가를 보다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대학교육 개혁과 관련, "대학의 전반적 경쟁력이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수준에 크게 뒤져 있다"며 "전국의 지역거점별로 15개의 연구중심대학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 IT분야 해외교수 초빙사업에 40억 지원

정보통신부는 국내대학이 추진하는 해외 IT(정보기술)부문 교수와 전문가 초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모두 4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4월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개별교수 초빙과 국제공동연구사업으로 나눠 실시되며 개별교수 초빙은 교수 1인당 최대 1억 원, 우수대학 지원사업은 9개 대학에 최대 3억 원이 각

각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IT관련학과가 설치된 4년제 대학 또는 대학원으로 초빙교수를 위한 기본연구시설 및 주거공간을 갖춰야 한다.

지원신청은 정보통신연구진흥원(www.iita.re.kr)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교수요원의 자질과 활동분야의 중요성, 국내 대학의 활용 및 지원 계획을 종합 평가해 선정한다.

● 산학협력 우수 기업 지원

교육인적자원부가 올해 산학협력 우수 기업 100개를 선정, 다양한 지원사업을 벌인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4월 19일 제주라마다호텔에서 열린 '100개 기업 지원사업'을 위한 워크숍에서 "100개소의 산학협력 우수 기업을 선정, 경제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원사업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학협력 우수 기업 선정 대상은 교육부의 BK21, NURI, 대학 특성화, 산학협력 중심대학, 전문대 특성화사업 등에 참여하는 5천 900여 개 기업과 지자체의 지역 특화 산업 관련 기업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들 기업 가운데 지자체별로 10개 내외의 기업을 선정토록 하는 방식으로 총 100개 시범기업을 선정한 뒤

인력 수급 및 활용 현황 등을 조사해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e-Learning 등) 제공 등 교육훈련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기업의 상품 및 기술개발을 위한 대학·연구소 등의 연구 정보, 인력 정보, 프로젝트 정보 등을 제공하고 대학의 자원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법률·경영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국가차원의 기업 애로사항은 인적자원개발회의의 의제로 다루도록 해 각 과제별로 소관 부처에서 제도를 개선하도록 촉구할 방침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에 따라 올해 산업체 파견근무를 희망하는 대학교원을 위한 활동경비로 2억5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산학협력우수기업 지원사업비로 500억 원의 예산을 반영할 예정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또 이들 100개 기업을 산학협력 우수 기업으로 인정 홍보하고 산학협력우수기업 인증제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검토기로 했다.

4월 20일까지 열린 이번 워크숍에는 교육인적자원부,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남도청, 제주도청 관계자와 제주대, 중앙대, 단국대, 전북대의 산학협력담당 및 관련 학과 교수, 자동차 차제 제조회사

아이씨씨(ICMC) 임철영 사장이 참가했다.

● 구조개혁영역 '정성적 평가' 추가

이번 수도권 특성화 사업에서 입학정원 감축 실적 및 계획 등을 평가하는 구조개혁 영역은 그동안 정량적 지표만을 중시하던 것과는 달리 정성적 부분도 중요한 평가요소로 사용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 구조개혁추진본부 류혜숙 팀장은 4월 20일 서울지역대학 기획관리자 4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전국사립대학교 기획관리자협의회 서울지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정성적 부분을 평가지표로 포함시키는 작업 때문에 사업발표가 조금 늦어지고 있지만 다음주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는 대학구조개혁 사업의 정책취지는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인 정량적 지표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한 대학이 특성화 하겠다는 분야에서까지 해당 전공을 정예화한다는 전제가 없는 이상 정량적 지표를 맞추기 위해 일률적으로 정원을 줄인다는 것은 대학구조개혁정책의 취지에 벗어나는 일이라는 의미다.

류 팀장은 "특성화 추진을 위한 정원조정 등 구조개혁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며 "모든 대학지원 사업이 구조개혁과 연계돼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조정 없이는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의 지원액이 너무 적은 것이냐는 지적에 그는 "정해진 예산으로 액수가 다소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BK사업, 수도권 특성화 사업 등과 연계하면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류 팀장은 이어 대학 규모별로 정원감축 기준을 차등화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한국체대, 교육대, 목포해양대 등 규모가 1천명 이하의 국립대에 대해선 2007년까지 입학정원 10% 의무감축 조치를 유보시킨 상태"라며 "수도권 특성화사업의 경우 사업자체가 규모별로 나눠져 있어 별도의 조정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광운대 기획예산과 홍명현 과장은 "정부의 구조개혁에 대한 그동안의 공금증을 조금이나마 풀 수 있었던 자리였다"며 "정성적 부분을 평가에 포함하겠다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라 이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교대·사범대 2009년까지 통합 추진...교원양성 일원화

이르면 2009년까지 교육대와 국립사범대를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초등교원은 교육대학에서, 중등교원은 사범대학에서 양성하는 이원화 구조로 이뤄져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통합, 일원화시켜 하나의 교육기관에서 양성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원단체총연합 등 교원단체들과 교육대학들은 교원양성제도 일원화 방침에 크게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인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4월 26일 "초등교원 양성기관인 교육대학과 중등교원 양성기관인 사범대를 통합, 교원양성체제를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통합과정에서 교육대학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초등교육의 내실화 등 교육선진화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와 관련, 지난해말 교육개혁위원회가 제시한 의견 등을 감안, 교원양성기관 평가인증제 등 교원양성체제를 2009년부터 전면 개편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에 따라 선택심화과목 중심으로 개편되는 제7차 교육과정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전문지식교

육이 이뤄지도록 구성돼 있는 만큼 초등학교 교사도 모든 과목을 가르치는 담임 중심이 아니라 전문과목 교사가 전공과목을 가르치는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를 위해 현재 7개 권역, 25개 대학이 포함된 국립대 통폐합에 맞춰 각 지역 대학과 사범대학 간 통합을 유도하고 이후 사립대학의 사범대학을 여기에 통합시켜 교원양성체제를 일원화할 방침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를 위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분리하고 있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관련 조항을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원을 통합·양성하는 방향으로 개정키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영어, 미술 등 초등학교 일부 과목은 교육대학 출신이 아닌 사범대학 출신이 맡고 있다”면서 “초등교육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교육대와 사범대 통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대학과 사범대 통합을 통해 교원양성체제가 일원화될 경우 교육대를 졸업하면 사실상 자동적으로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는 현재 방식에서 교과목별로 심화지식교수법을 습득한 전문교사가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돼 초

등학교 교육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인적자원부의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교원양성체제 일원화는 대학구조조정과 별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교대 간 통합, 사대-교대 간 통합, 교육전문대학원 설립 등 다양한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대 관계자는 그러나 “초등교원과 중등교원은 서로 다른 전문성을 유지해야할 뿐 아니라 통합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다”고 통합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한편 현재 교육대학은 서울교대 등 전국에 11개로, 매년 5,000여 명의 졸업생 대다수가 초등학교사로 임용되고 있다. 반면에 사범대의 경우 국립대 13개, 사립대 14개로 졸업생 1만여 명 중 중등교사로 임용되는 숫자는 3,900여 명이다.

● 10개 사립대학에 대해 회계검토 지시

교육인적자원부는 사학 회계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도입한 사학 회계검토를 금년도 중 10개교에 대해서 실시하기로 하겠다고 밝혔다.

사립대학에 대한 회계검토는 상당수 사학에서 회계관련 법령·지식 부족 및 잘못된 관행 등으로

회계부조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진단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의 일환이다.

사학 회계검토 방향은 교육인적자원부가 민간 회계법인과 함께 사립대학의 재무·회계운영 전반을 지도·점검하여 사립대학 스스로가 문제점을 바로 잡도록 하는 데 있다.

금년도 회계검토 대상 대학은, 5년 이상 교육인적자원부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을 중심으로 학생 수, 지역 등을 고려하여 10개 사립대학을 선정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회계검토를 통한 점검사항은 결산서 계정잔액의 적정성,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령·지침상 회계관련 규정의 이행여부, 내부통제장치 평가, 기타 회계운영상태를 중심으로 법인 및 설치 학교의 최근 3개년 동안의 회계전반을 검토·지도하게 된다.

회계검토 실시 결과에 따라 회계검토시 지적된 회계운영상의 문제점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시정·개선토록 하여 향후 건전한 회계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법률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별도 감사를 실시하여 조치할 예정이다.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2006년 이후부터는 회계검토를 30개 대학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며, 회계검토 결과를 분석하여 사립대학에 필요한 합리적인 회계처리기준, 절차 등을 개발하여 전 사립대학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 나노 IT 연합대학 서울이 들어선다

서울시가 노원구 공릉동 일대에 건설중인 NIT(NT+IT) 미래기술산업단지에 내년까지 나노IT에 특화된 대학원과 대학교를 세운다. 4월 27일 서울시는 스웨덴 왕립 나노전문대학원을 모델로 삼아 서울산업대 주관으로 연세

대·고려대·한양대 등 서울 소재 15개 대학이 참여하는 나노IT 연합대학원·대학교를 세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노IT연합대학원·대학교 설립 주관 대학인 서울산업대학교는 5월 교육인적자원부에 학원설립 신청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참여 대학은 연세대, 서강대, 이화여대, 고려대, 서울시립대, 한양대, 광운대, 한성대, 경희대, 국민대, 서울여대, 육사, 세종대, 단국대 등 총 15개 대학이다.

서울시 산업지원과 박중권 팀장은 “나노IT연합대학원·대학교는 스웨덴 첨단산업단지인 시스타(KISTA) 내에 스웨덴 왕립

대학과 IT기업 에릭슨이 공동 설립한 나노전문대학원을 모델삼아 첨단산업과 연계한 전문대학원·대학교로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노IT연합대학교는 참여 대학의 나노 관련학과 교수와 산업체 전문가들로 구성된 교수진이 참여하며 각 대학에서 1, 2학년 과정을 마친 학생 가운데 해마다 산업체 수요조사를 통해 필요한 정예 인원을 뽑아 교육을 하고 전원 취업시키는 형태로 운영된다. 대학원은 학기당 30명의 소수 정원으로 구성되며 나노 제조장비 분야에 특성화된 전문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